

국힘 '조기 수습' 기조 속 '이상민 발언' 내부서도 비판

(행안부 장관)

비대위 회의, 사회 안전망 재점검 약속... 별도 대책기구 구성 않기로 김기현 "언행 조심했어야"... 가짜 뉴스·경찰관 향한 유언비어 등 단속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 속에 '사태 수습 우선'의 기조를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강조, 정기 국회에서 사회 안전망 전면 재점검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

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경찰관·소방관을 향한 유언비어 유포를 두고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애도와 위로의 뜻을 밝히면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검은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회의실 배경판도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문구로 바꿨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정리할 것이 예산도 있고 법안도 있다"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여러 케이스들이 있으니 검토해보고 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서울시청 광장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

가 몰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며 "(사전 대책 수립이)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너무 슬프고 참담한 심정인데 해당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무겁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지자체라든가 경찰로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는

가 하는 생각"이라며 "일반 국민들 듣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별도 대책기구를 꾸리는 등 당 차원의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여주기식 대응보다는 차분히 정부의 사고 수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SNS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가짜뉴스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라는 등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부부 조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자 위로금 2000만원·장례비 1500만원

정부, 유가족 지원 대책 발표...가족 심리치료·통신 요금 등 납부 유예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

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계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잘하고 있다 35.7%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국민의힘 37.6%·민주당 46.4%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개월 만에 30%대 중반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28일 전국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7% (매우 잘함 20.0%, 잘하는 편 15.7%), 부정 평가는 61.7% (매우 잘못함 54.4%, 잘못하는 편 7.2%)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 조사(17~21일) 대비 긍정 평가가 2.8%

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주간 단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부정 평가는 2.7%p(64.4%→61.7%) 하락했다. 7월 1주차(37.0%) 이후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을 오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6주 만에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긍정 평가는 서울(6.7%p ↑), 대구·경북(6.0%p ↑), 대전·세종·충청(4.3%p ↑), 남성(3.1%p ↑), 여성(2.6%p ↑), 70대 이상(7.9%p ↑), 40대(3.4%p ↑), 60대(2.7%p ↑), 30대

(2.6%p ↑), 중도층(3.9%p ↑), 진보층(3.0%p ↑)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2.2%p ↑), 무당층(2.5%p ↑)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3%p 오른 37.6%, 더불어민주당은 2%p 내린 46.4%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3.5%로 집계돼 전주(3.6%)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상민 "경찰력 배치 문제 없었다"

행안장관, 합동분향소 찾아... "인파 늘어난 만큼 경찰력도 늘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난 31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 서 조문한 뒤 "경찰·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는 또 취재진에게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더 깊게 연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포착된)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헬리콥터를 맞아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 8~10만에서 이번 13만으로 예년 대비 30% 정도 늘었고, 경찰은 예년 80~100명에서 올해 130여명으로 40% 증원이 됐다"며 경찰력 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발표)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전날 발언을 해명했다. /연합뉴스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